

민주노총 탈퇴공작은 구조조정 신호탄이다

지난 8일(목) 전국적으로 지방본부별 지부장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지부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부터 지부장들은 민주노총 탈퇴 서명을 거의 완료한 상태였다.

회사의 개입으로 불법적으로 등장한 김구현 집행부는 어용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부장들의 의견이라는 명분을 이용하고 있지만 노조위원장에서 지부장까지 사측의 공작에 돌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대중공업처럼 민주노총 탈퇴이후 해외 여행에 골프나 즐기는데 있어 노조간부들이 이제는 어떤 눈치도 보지 않는다.

◆민주노총 탈퇴의 동기는=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는 것일까.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침해하는가? 아니다. 우선, 자주성 없는 노조의 배후에서 조정질하는 사측의 요구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 한 이석재 회장의 등장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후퇴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 정부는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 역공을 취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교조를 포함한 노동계를 탄압 분열시키는 것이다. 사측의 꼭두각시 KT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켜 노동계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게 되면서 KT노조 간부들이 찬밥신세가 되었

다. 간선제 하에서는 그래도 선거 때 대접이라도 받았다. 그러나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KT노조 간부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지금 사측은 공세적으로 민주노조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민주동지회원들의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발령과 징계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이다. 민주노총에서 노조가 탈퇴하는 순간 이전에 탈퇴한 노조의 경우처럼

드러내 놓고 사측의 손과 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슈화 되고 있는 넷워크부문 분사 문제 또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 총회가 곧 열릴 것이다. 팀장들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위에서 시킨다며 날땀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노조의 개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아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 퇴로는 없다.

조합소식

<성명>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가며

KTU

추천KT노동조합 성명서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가며

KT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함께 한 19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7월 17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노총과 함께 한 지난 19년의 역사는 KT노동조합 민주노총의 역사와 같다는 점에서 무조건 고도 비평할 수밖에 없을 수 없다. 하지만 KT노동조합은 <조합원권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조합원권과 함께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주노총 탈퇴를 선택한다.

공 고

KT노동조합 규약 제11장 제20조, 제21조에 의거 임시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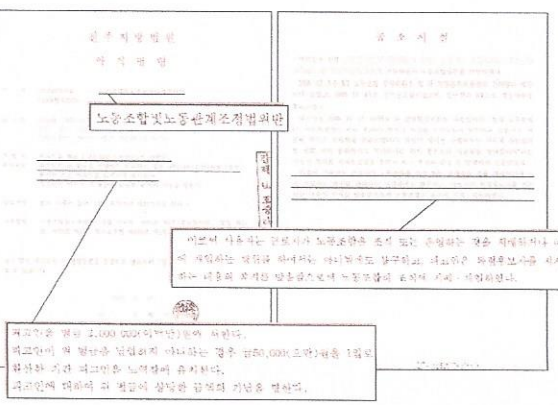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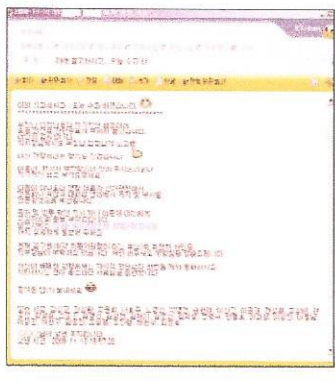
- 아 래 -

- 일시 : 2009.07.17(중) 09:00 ~ 18:00
- 장소 : 각 지부 및 본회에 투표 가능한 장소
- 출석사항
 - KT 노동조합 집행진
 - 조합원에 투표권

2009년 7월 10일

KT노동조합위원장 김 구 현

사측 선거개입 꼬리가 길면 잡힌다



지난 노동조합 선거에 사측이 후보자 추천에서부터 깊숙히 개입해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전주지방법원에서는 ○○○ 팀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판결을 내렸다.

전북지방본부 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원병희 동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결합되어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현재 공대위는 공개 사과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출근 1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KT내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이석채 회장은 줄세우기와 보복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KT합병 이후 조직개편, 인사발령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지난 6월 특별한 인사조치가 있었다. 5월 29일 임금찬반투표 결과 (88.5% 찬성), 65%의 찬성율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남부 마케팅단 안산지사 사건이다. 지사장, 부장 및 소극적으로 활동한 팀장들이 6월 10일까지 차례로 비보직, 비연고지 인사조치가 되었다. 그리고 6월 15일 반대인사를 표명한 조합원들을 전보조치한 것이다. 전보조치의 이유는 고과연봉제가 가져 올 문제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부당노동행위에 같이 대처하자고 요청한 것이었다. 정기발령 시 안산 내에서는 반대인사를 밝힌 조합원 대다수의 발령이 있을 것이란 소문도 있었다.

◆ 줄세우기와 보복인사는 KT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석채 회장은 취임 직전부터 민주적 노조활동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노조선거에 출마했던 민주적 성향의 후보나 운동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해 왔다. 안산지사 사건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향후 강제명퇴 등의 구조조정, 임금제도 개혁, 조직개편, 상품판매 등 불법

적인 회사방침에 절대 토를 달지 못하게 한다. 줄 세우기에서 뒤로 밀린 지사는 용서할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

◆ KT에서 노조행사에 지배 개입한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6년도 노조선거 이후 99년도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불법의 정도도 갈수록 심해져 왔다. 이석채 회장은 최소한의 상식 있는 노조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연봉제까지 회사조직의 힘으로 관철시켰다. 현장의 조합원들도 서로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그리고 결국은 퇴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고과연봉제가 가져올 여러 가지 폐해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들을 때리고 겁준다고, 그래서 순종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KT 위기의 본질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 끈질긴 저항으로 반드시 KT내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안산지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모든 이들은 복귀되어야 한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자주적인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조합원들도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결코 물러설 수 없기에 투쟁을 시작한다. 우리 스스로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KT의 불법 부당함을 알려 나갈 것이고, 법적 투쟁도 지속될 것이다. 이미 전국의 원병회 조합원은 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 19회째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과연봉제 도입으로 KT는 우리에게 노예처럼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불법 지시가 판을 쳐도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비록 작은 투쟁이지만 그 불씨가 KT내에 확산될 것이다. KT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하여 끈질긴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MB정권 하에서 후퇴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밝힌 수많은 촛불을 생각하며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 서부분부 비리연루자 147명 적발

KT내부 부패구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남 전 사장이 구속되어 KT 전 사원의 얼굴에 먹칠을 한지가 엇그제인데 또 다시 KT 부패비리 문제가 모든 방송 언론에 주요기사화 되었다. KT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 각종 광고에 많은 비용 투자를 마다 하지 않건만, 또 다시 추락한 KT의 위상을 보며 모든 임직원은 허탈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그 동안 '많이도 해먹었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정리되어야 한다며 인과응보라는 반응이다. 실제 대부분의 조합원은 비리연루 구조를 보며 자신들만의 라운드를 즐기는 뺑이는 주류들에 밀려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이미 KT전국민운동지회에서는 KT내부의 폐쇄적 반민주적 질서와 내부 견제 세력으로서의 노조가 무력화 되어있는 현실이 부패를 낳게 한 구조적 요인임을 지적해 왔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KT내부 민주주의의 현실이 무슨 비리인들 만들어내지 못하겠는가.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난 이석채 경영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어용노조를 불법적으로 탄생시킨데 이어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오늘날의 제3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승호, 심승보 선배님의 정년퇴임식이 많은 하객 분들의 축하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준비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사제공 업무용폰,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대비책 필요

지난 5월29일 체결된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舊 KT 조합원 업무용폰 통신비를 회사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지원 및 세무 Risk 축소를 위한다는 이유를 들며 현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을 회사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직원의 사생활 침해다.

휴대폰 명의가 회사로 되기 때문에 위치 정보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합법적으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통화내역 또한 회사에서 얼마든지 합법을 가장하여 알아낼 수 있게 된다.

둘째, 휴대폰 명의가 회사로 된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 역시 회사가 갖게 된다고 본다. 그럼 지금의 휴대폰에 대하여 가치를 평가한 후 그 대가를 직원 개개인에게 지불해 주어야 하고, 나중에 휴대폰을 바꾸고자 할 경우 발생하는

보상판매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셋째, 휴대폰 명의변경에 대한 직원의 동의여부를 묻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선 종전의 지원정책을 유지해야 됨이 당연한데 이 역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지원을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식이다.

넷째, 휴대폰 명의변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염려하는 직원의 경우 별도의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직원도 있다. 이는 통신비 전액지원을 무력화 시킬 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업 매출 증대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위에 열거한 사항 외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노사합

의 말고도 이에 대한 세부시행 절차까지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해야 하는데 노조는 노조대로 나 몰라라 하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회사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오만함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공개토론회] 합병 KT, 어용합병노조로 노동강도 강화시킬 것

6월 19일(금) 민주동지회 사무실에서 2009년도 제 1차 정기토론회가 수도권 회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KT합병의 의미와 구조조정/임금구조, 그리고 합병 이후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주제로 조태욱, 이해관 동지가 발제하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조 동지는 13년 전 유무선통합을 주장했던 우리들에게 합병의 의미는 남다르지만 KT노동자



들에게는 또 다른 착취와 더욱 강도 높은 통제로 불안한 미래가 놓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좀 더 과감한 활동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동지는 군불지피기 투쟁, 즉 향후 고과연봉

제에 따른 D등급자 피해자들, 연령별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묶어 저항의 주체로 만드는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충북의 한미희 동지 복직에

서 보았듯이 지역에서의 연대에 대한 의미도 되새겨 보았습니다. 첫 토론회라 다소 부족한 측면도 있었지만 회원들의 참여와 비교적 진지했던 토론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7월에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투고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자적 행태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정리하고 반대를 위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60여일을 향해 가고 있지만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공권력 투입이 조망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다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쌍용차는 1조원 정도의 공적 자금만 투입되면 얼마든지 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쌍용차의 회생 여부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20만 노동자의 고용이 달려 있다고 한다. 노동자의 고용과 국가경제를 위해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GM을 살리기로 일찌감치 결정한 미국의 오바마정부와도 극명히 대비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채권은행단에서는 회생 자금의 투입여부를 오직 정리하고 이행과 연동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도록만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자적인 태도는 최저임금 결정, 비정규직법 개정시도 등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



시속 용역 철수 후 일싸안고 눈물 흘리는 쌍용차노조 조합원 가족

금을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으로 결정하였다. 단돈 110원 인상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올해 최저임금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5%인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게 인상시킨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애초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행법상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었다. 이는 나라 전체를 온통 비정규직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안좋은 것을 느끼고 결국 범시행을 3년만 유예하자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금 국회는 어떻게든 유예기간을 늘리려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및 노동단체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니 노동자들이 희생을 감수하라고 한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면서 노동자 서민들에게만 희생을 감수하라면 그게 앞뒤가 맞는 일인가? 30조원을 들여 4대강 살리기를 하면서 20만 명의 고용이 달린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해 1조원의 공적자금투입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안 될 일인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살려서 결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많은 뜻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진단을 현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가? 정부가 이처럼 노동자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진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한다면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해고의 자유” 늘리자는 대통령 심판해야

[주장] KT 3만인 시국선언을 제안한다

‘자유’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같은 의미로 생각할까? 노동자가 생각하는 자유와 자본이 생각하는 자유는 다르다. 전자가 정치적으로 평등하고 자신의 의사와 행동이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라 생각하는 반면 후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벽이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와 재계의 요구는 ‘고용해서 쓰다가 필요 없으면 해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생존권을 왜 자신들이 보장해야 하는가’이다. 이들에게 비정규직 문제,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쇠귀에 경 읽기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반민중적 국정운영기는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친소 수입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노 전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에 분노하여 5백만 인파가 조문의 행렬에 줄을 서며 서울 시청으로 전국 각지역 집회 장소로 모이들었다. 갈수록 더해가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노동자 서민의 목을 조이는 부자들만의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안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다.

◆**각계각층 이명박 퇴진 시국선언으로 이어져**= 최근 진보 개혁 진영에서는 이명박 퇴진 시국선언과 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퇴진 투쟁 선언에 이어 전교조에서도 연이어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노동계는 물론 농민, 청년학생과 빈민단체, 교수들과 종교계까지 시국선언이 진행되었다.

이에 놀란 정부는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탄압을 자행하는가 하면, 기부 아닌 기부금 생소를 하며 국민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시국선언이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노동자이다. 몇 푼이나 된다고 최저임금을 깎으려 드는가? 그나마 남아 있는 정규직마저 정리해고 시키려 드는가?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노동자이다. 노동자의 정치의식이 높아질 때 정치도 바뀌게 마련이다.

아직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의 시국 선언도 다 진행되지 못했다.

KT 3만 조합원의 시국 선언을 제안한다.